

화학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해야

소버린투자운용의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이 SK 주식을 대량 매집함으로써 촉발된 SK와 SK텔레콤의 경영권 위기가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든 느낌이다. 소버린이 4월18일 SK 주식을 더이상 사지 않음은 물론 SK텔레콤의 경영에 관여할 뜻도 없다고 발표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때문이다. 오히려 SK그룹이 출자총액제한 해제 등으로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

크레스트증권의 SK 주식 매집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 크레스트증권이 지분을 대량 매집하는 동안 SK그룹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SK 주식 14.99%를 매집한 소버린은 왜 SK와 SK텔레콤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을까? SK텔레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소버린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 것인가? SK는 경영권 위기에도 불구하고 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가? 결국에는 소버린이 SK의 백기사 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소버린이 SK 주식 매집에 나서 지분 8.64%를 매입했다고 공시할 때까지 SK그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버린이 SK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짧은 기간동안 주식매집에 나선 점을 들어 『SK와 소버린이 사전 교감을 통해 사태를 물고 오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소버린이 4월 14일 SK 지분을 14.99%까지 매집한 이후 『더 이상 추가매집은 없다』고 발표한 것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소버린이 SK의 주식 0.01%를 추가 취득하면 SK텔레콤에 대한 SK의 의결권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소버린이 SK와 SK텔레콤을 동시에 지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의 1대주주로 외국인이 등장하면서 출자총액제한이 풀렸고, SK글로벌 회생을 위해 그룹 계열사들이 나서라는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생긴 상태이다. 소버린이 백기사로 활동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이다. 따라서 SK가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을 소버린을 통해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더 큰 문제는 소버린과 SK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사태를 끌고 왔느냐 하는 점보다는 SK가 왜 이 지경까지 몰리게 됐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에너지 및 석유화학 사업을 축으로 하는 SK그룹이 국민일반의 믿음을 저버리고 졸지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배경이 자못 궁금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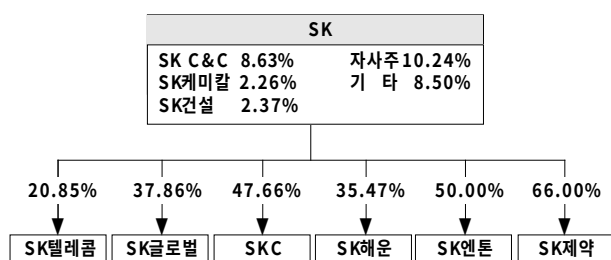
SK는 1970년대 말 유공(대한석유공사)을 인수해 국내 1위의 정유·석유화학기업으로 부상했음은 물론 재벌 순위에서도 10위권으로 진입해 모두의 부러움을 산 바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1990년대 말에는 통신 사업에 진출해 국내 통신시장을 KT(한국통신)와 양분함으로써 탄탄대로를 걸어왔고, 현재는 재벌 3-4위에 몰라 있다.

그러한 SK가 SK글로벌의 부실회계를 기화로 일거에 몰락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렸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국내 석유시장의 특성상 국제유가가 Dubai유 기준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었다고 크게 손실을 볼 일도 없으려니와 석유화학은 2002년 가격급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SK는 2002년 매출액이 13조3881억원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881억9500만원으로 31.3% 줄었으나, 경상이익은 3906억6200만원으로 254.1%, 당기순이익은 2968억1200만원으로 225.4% 큰 폭 증가했다. 고유가 및 석유화학 호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경영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SK글로벌의 부실회계 부분인데, SK글로벌

SK의 주주 및 계열사 지분



벌의 회계부실이 8조원을 넘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는 점에서 SK그룹 전체가 부실집단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도 화학제품 전자상거래 등 사업확장에 몰두했을 뿐 구조조정을 게을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화학기업,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은 부실회계와 거리가 멀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3/4/28>